

전북자치도의회, “尹정부,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

“사도광산 등재 협조 대가 치를 것”

민주·진보·정의당 소속 도의원 명의 성명서 발표 “도민들과 함께 탈식민 향한 주춧돌 쌓아가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서난이·윤수봉·최형열·한정수 의원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의원 일동 명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정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해방 79주년이 되는 해로, 식민 지배가 종식된 지 79년째가 되어 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고, 탈식민을 향한 노력도 진땀에 진땀만 흘린 채 식민주의의 공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역사적인 지학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최근 일본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가 여전히 식민주의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사물자에 필요한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는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도광산을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 식민지배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서 박정규 의원은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그늘을 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서난이·윤수봉·최형열 의원 등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의원 일동 명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폐시킨 채 자국 산업화의 영화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7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사도광산을 일컬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공업 방식의 채굴과 제련기술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이 지난 우수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21개 회원국 모두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는 문구로 끝을 맺으며 “회원국 모두가 사도광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계유산 등재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준 것”이 감사하다. 물론 일본정부가 감사를 표하는 대상 국가에는 회

원국인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국민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불역사적인 행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일본에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이며,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주

근대화를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게 광복 79주년을 맞는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며, “일본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굴하게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는 협조해 주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상식과 반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식민주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 경험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도민들과 함께 탈식민을 향한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가겠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위촉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8명으로 구성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7일 의정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승우 의장은 “위원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양군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위원 임기 만료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승우 의장은 “위원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양군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박정규 도의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및 빙상팀 훈련장을 방문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구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모두 부상 없이 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가올 대회에서 훌륭한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현재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하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박정규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최형열 도의원, 전주 신덕마을 등 민원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전주5·완산구에 소재한 신덕마을, 정동마을의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형열 위원장은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의견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이날 현장에는 최형열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청 및 전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을주민의 애로사항을 전례 듣고 현장을 점검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옴짝 빼이고 좁은 도로에 가드레일까지 없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드레일 설치 등 하루빨리 도로

국회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논의

민주 정동영 의원·국힘 최형두 의원 공동주최 조찬포럼… 신기술 발전 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인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7일 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인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7일 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및 학계 대표로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 참석했으며, AI 기업 대표로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최재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인 ‘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시작을 열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AI 수준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독자적 강점을 살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계 성장을 도모하고, AI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의 주요 정책으로 세계 최고 AI 혁신 생태계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변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국 AI 반

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인프라와 급증하는 AI·디지털 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 창의적인 핵심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전반의 AI 활용도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과 SOC와 차별화되는 AI·디지털 중심 지역발전 모델 구현으로 지역의 AI·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관이 합심하여 명실상부 AI G3로 도약하고 AI·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 30년 전에 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금전적인 지원과 투자로 현재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이 살아 있는 것처럼 AI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도록 K-클라우드·AI·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K-클라우드 AI를 심을 칩 CSP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훈동 KT CTO,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AI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금융, 모빌리티, 의료, 교육, 공공이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AI 맞춤형 규제 길을 국회에서 열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AI 업계의 문이 열리고,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 90퍼센트가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 연봉을 올려줄 수단이 아닌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AI 시대를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기관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국민이 향

한 ‘실득’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최민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박권근·이상휘·최보은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동영 의원, 오늘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국회의원이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차 회담 모색’을 주제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첫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4차 회담 중 중국 입장에서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4차 회담 중 미국 입장에는 국립외교원 원장을 역임한 홍현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그리고, 김희교 평문대 교수와 이해정 중앙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창립총회를 겸한 토론회는 “남북 긴장 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비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정동영 의원은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 “석산개발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해당업체 등 대상 관련 절차 진행… 주민 신뢰 바로세우는 계기”

고창군이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 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허가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과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가 허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

하고, 잘못된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이점이 있어 감사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별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창군은 “지역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